

#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박영호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최** 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및 대북 정책과 관련, 한국과 미국간에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일련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간의 협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가 핵심 협안의 하나였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추가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금년도에 북한에 제공해야 할 중유의 비용 가운데 1,200만 달러를 일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2월 5일 미의회에 제출한 97회계년도 예산보고서의 대외 부문에서 “아시아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가하기 위한 협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이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제휴가 이뤄졌다”고 밝혀 북한 핵문제 처리를 미국의 대외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미국의 행동이 최소의 비용 부담으로 과거와 같은 대외적 지위를 누리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 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는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시도되었으며, 결국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간의 협상으로 일단 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즉,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 협상에서 3단계 1차 고위급회담(1994. 8. 5~12) 및 2차 회담(1994. 9. 23~10. 21)을 거쳐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을 도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제공되었다. 특히, 이 합의문은 내용의 성격 상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북미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 관계가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1995년 3월 9일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집행 이사국이 되는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설립되었으며, 1995년 6월 12일 북미간 칼라룸푸르

準고위급 회담 합의를 거쳐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의 동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 사업이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11월 8일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美의회의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공화당이 주도하는 美의회가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북미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의문 이행 과정에 있어 다각적으로 제동을 걸게 되었다. 비록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이 미국의 북미 합의문 불이행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제공과 관련한 미국의 재정 부담이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이나 美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모두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선거 전략상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남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 확대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을 대외 정책에서의 중요한 논쟁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남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 확대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북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폭과 속도 및 남북한 관계 진전과의 연계 문제로 한미간의 마찰이 예상되며, 일본은 북미 합의를 계기로 대북한 관계를 재설정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미 관계 및 대주변국 관계 재점검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북미 합의 관련 미국 내 논의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 및 관계 개선은 북한측의 핵동결 조치와 맞물려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면밀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 개선도 미국측이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기본적으로 북미 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북미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와 북한의 철저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내에서는 북미 제네바합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대두되었다. 당시의 미국 내의 평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북한과의 포괄 협상은 그 방식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핵비확산 노력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생존의 안전 장치로서 핵카드를 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체제 인정을 포함한 포괄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 북한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이를 유보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셋째, 비록 북미간의 합의 내용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합의라는 점에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상호 상충적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충

실히 이행한다면, 합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유보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기본적으로 북미 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북미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와 북한의 철저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내의 고위 관리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주도하여 북미 합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재를 가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미 합의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민주당 행정부 내 관리들도 갈루치(R. Gallucci) 등 소수의 핵비확산 전문가들이 주도한 대북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대한 불만도 일조할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의회측은 1995년 1월 중 개최된 일련의 상원 청문회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대화 및 남북 현안에 대해 보다 신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

였다. 이와 함께 미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 7명은 북미 합의 사항 이행과 남북 대화를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정상회담, 남북 합동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상·하원에 각기 제출하기도 하였다(1995. 1. 25).

이후 공화당계 일부 인사들은 의회 상·하원의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채택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권고안(Sense of Congress) 결의 등을 통해美 정부가 합의 이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미 하원과 상원은 9월 18일과 9월 21일 각기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대북 결의안<sup>1)</sup>과 KEDO 예산 집행 관련 단서 조항을 첨부한 대외 원조 법안<sup>2)</sup>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들

미국 정부나 의회는 모두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는 한편, 한국측에 대해 가급적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데에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특별한 대안없이 민주당 흠집내기식 비난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 이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미국 내 비판 인사들을 상대로 북미 합의의 긍정적 의미를 집중 홍보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 합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주된 논지는 첫째, 북미 합의가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완전한 폐기까지를 포함한 합의이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종식시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대북 경수로 지원은 5~10년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그동안 서방 세계는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북미 합의 이행에 있어 미국은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북측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서방측의 대북 지원 조치 또한 중단될 것이고, 넷째, 대북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지원에 있어 미국은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미국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 1) 남북 대화, 비핵화 공동 선언 이행,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후방 배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시 등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한, 연락사무소 이상 수준으로 북미 외교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고, 대북 무역 및 투자 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북한 지원 및 KEDO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2) KEDO 관련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3개월 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 회사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KEDO에 美정부의 예산을 지출하려면 남북 불가침 및 비핵화 공동 선언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대북 관련 결의안 채택은 1996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외 정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공화당의 정치 선전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반응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나 의회는 모두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는 한편, 한국측에 대해 가급적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데에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 경수로 공급 협상의 진행 과정

한·미·일 3국이 집행 이사국이 되는 1995년 3월 9일에 KEDO를 설립하면서 설립 협정문에 '한국형 경수로'를 명기함으로써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북미 경수로 전문가 회담(3. 25~27)에서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을 거부했다. 제4차 경수로 전문가 회담(4. 12~14; 4. 18~20)에서 북한은 KEDO와의 공급 협정 체결 용의를 표명하고 설계·제작·시공에서 한국의 제한적 참여 등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 결과 북미간 경수로 전문가 회담은 결렬되었고, 대북 경수로 공급 협정은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목표 시한(1995. 4. 21)을 넘기

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갈루치 대사와 강석주 부부 장관의 제네바 고위급 회담 제의(4. 21)를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었다.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허바드 미국부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개최된 팔라뭉푸르 준고위급 회담(5. 19~6. 12)에서 합의된 사항 중 다음 두 가지는 특기할 만하다. 첫째, 공동언론발표문에 한국형 경수로를 지칭하는 표현<sup>3)</sup>을 사용하여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우회적으로 기정 사실화했다. 둘째, KEDO가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 선정권을 갖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한국 기업의 주계약자 선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준고위급 회담의 타결 이후 KEDO 사무국 개선(7. 20), 제1차 KEDO 총회가 개최(7. 31~8. 1), 3개 자문위원회(경수로 사업, 대체 에너지 공급, 핵연료봉 처리)의 구성으로 경수로 지원 사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KEDO는 팔라뭉푸르에서 제1차 공급 협상(9. 11~15)을 개최했으며, 협상은 신체 회의(9. 11~13)와 실무급 전문가 회의(9. 13~15)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2차 공급 협상은 실무 협상과 전문가 회의로 나누어 각각 9월 30일과 10월 16일부터 뉴욕에서

3) 예컨대 "KEDO가 노형 선정권을 갖는다", "두 개의 명각재 배관을 가진 1,000 메가와트 발전 용량의 가압 경수로 2기", "미국의 원전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 중인 개량형" 등의 표현이다.

진행되었다. 한편, KEDO는 경수로 건설 부지를 신포 해안 지역에서 약 1.5 km 쯤 떨어진 지역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1차: 8. 15~22, 2차: 10. 24~11. 4)를 실시했다. 뉴욕에서 약 2 개월 반(9. 30~12. 15)에 걸쳐 전문가 회의 및 고위급 회의로 진행된 제2차 공급 협상은 공급 범위와 상환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12월 15일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되었다. 공급협정문에 한국형 경수로가 직접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KEDO가 노령 선정권을 가지며, '일괄 수주 방식의 1,000 MWe급 가압 경수로 2 기'의 공급이 명시됨으로써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이 보다 명백하게 되었다.

한편, IAEA는 1995년 9월 2일~19일까지 일주일간 대북 사찰을 통해 북한의 동결된 핵 시설(5 MWe 원자로 봉인, 50 MWe 및 200 MWe의 건설 중단, 방사 화학 실험실 폐쇄, 핵연료 제조 시설의 폐쇄)이 IAEA 사찰관들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에 의한 사용후 연료봉의 플루토늄 양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IAEA가 '사용후 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IAEA 제39차 정기총회(9. 22)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찬성 71 개국 기권 10 개국)하는 동시에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북한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용후 연료봉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술진이 1995년 6월 말 1차 방문에 이어 9월 초 북한을 재방문하여 사용후 연료봉(총 8,000여 개)의 안전 보관 방법에 대해 북한과 협의했다. 미국은 수조 속 물의 화학 처리에 대해 기술을 지원했으며 양국은 일단 건식 방식으로 밀폐 용기에 보관한 후, 경수로 완공시 안전 지역으로 이전·보관하기로 합의했다.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후 금년 1월 하순 이후 건식 보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북 대체 에너지 제공 문제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각각 5만 톤(합의문 체결 후 3 개월 내 공급분)과 10만 톤(1995년 10월까지의 공급분)의 중유가 이미 제공·완료되었다. 처음 5만 톤은 미 국방부 예산으로, 2차분 10만 톤 중 7만 톤에 대한 비용은 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충당했으며, 나머지 3만 톤에 대한 비용은 KEDO가 부담했다. 북한에 제공된 중유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美대표단이 북한을 방문(1995. 6. 18~23)하여 전용 방지 감시 체제 설치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 향후 전망 및 예상 문제점

경수로 공급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향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사업은 경수로 건설

경수로 공급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향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사업은 경수로 건설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 KEDO와 북한간에 공급 협정 이행을 위한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KEDO와 주계약자(한국전력)간 상업 계약 체결,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 선정, 주계약자와 하청 업체들간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 KEDO와 북한간에 공급 협정 이행을 위한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KEDO와 주계약자(한국전력)간 상업 계약 체결,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PC) 선정, 주계약자와 하청 업체들간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부지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3차 부지 조사(1995. 12. 14~1996. 1. 16)가 종결되고 4차 부지 조사(1996. 1. 14~2. 17)가 실시되고 있다. 공급 협정 체결 후 진행되고 있는 부지 조사에서는 한국측 기술진과 장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협상에서는 북한이 비용 문제에 따라 신포를 제외하고 있는 상태에서 KEDO와 북한간에 상호 입장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대북 중유 공급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미국은 현재 금년도 중유 공급분 50만 톤에 대한 비용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중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 협상 재개를 촉진하려는 맥락에서 일정한 정도의 비용 부담을 수용하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소한 1996년도 공

급분 중 몇개월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한 비용 총량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EU)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미국은 EU가 상당한 정도의 비용 부담을 맡을 경우 KEDO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발언권을 부여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경수로 공급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해석, PC의 역할과 위상, 주계약자 선정, 비용 산정과 각국의 부담 규모 등을 둘러싸고 남북한, 미국, 일본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간에 비용 부담이나 PC의 역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남북한 및 한일간의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및 입지 확보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비용 부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사업을 청부받기 위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 공급 협정분에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업 관계자들의 신변 안정 보장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변 보장을 비롯하여 기술진과 건설

인력, 각종 장비와 자재의 북한 반입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영사 보호, 통행·통신·통관 등)를 구체화하는 문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진과 인력의 방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 미국의 입장 전망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전략인 핵확산 금지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대북한 경수로 사업에서 최소한의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실질적 참여의 폭은 확대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대북 정책의 기초를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에 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특히 의회의 반발을 고려하여 명분있는 대북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의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척되는 데는 다양한 조건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미 상호간의 약속이 양국간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이행되는가 여부이다. 북한 측의 경우 경수로의 주요 부품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이 지속되는 한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미국측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고려 사항 등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북한 측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즉, 인권의 개선, 미사일 수출 및 기술 개발의 중단, 전방 배치 병력의 후방 철수 및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이 미국의 주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 인도되는 시기까지(향후 5~6년 동안) 자신들의 핵시설 동결 이외에는 특별히 이행할 사안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동결을 이행하는 대가로 미국측이 이행할 사항, 즉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한 대체 에너지(중유) 공급 문제 등은 미국내 정치적 고려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일차적인 문제는 북한에 제공될 대체 에너지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것이다. 즉, 미국이 이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위해 각국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고는 있지만, 북한 핵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조차도 비용 제공이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단독적인 비용 지불 또한 미국 내 여론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미간의 합의 사항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건설이 필수적이고, 관련 진행 상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미



양국은 연락 사무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함으로써 사태의 반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이 지속되는 한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미국측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고려 사항 등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북한 측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즉, 인권의 개선, 미사일 수출 및 기술 개발의 중단, 전방 배치 병력의 후방 천수 및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이 미국의 주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북한 측에 종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전 협정의 대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거나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철폐 논의, 군축 논의의 본격화 촉구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간에 논의된 비용 분담 문제에서 국내적인 여건 및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안정에 대한 기여 등을 논기로 가급적 많은 부분을 한국과 일본에 전가하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대북 중유 공급을 위한 비용 충당에 서는 일본 또는 EU의 참여를 통한 기여에 더욱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향후의 대북

한 협상을 KEDO 창구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대북 단독 협상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KEDO-북한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북·미 양자간 대화 창구를 활용할 것이다. 미국은 일단 북·미 기본합의문과 경수로 공급 협정 상의 미국측 및 KEDO측 이행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락 사무소 개설, 대북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 미국 기업의 대북 진출 규제 완화, 중유의 지속적 공급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미간 연락 사무소의 설립 후에는 동 기구를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서 심분 활용하는 한편, 북한 군부의 동향 파악과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전달 창구 설정의 필요성을 감안, 군부간의 새로운 창구 개설 노력도 경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미 기본합의문에 포함된 남북 대화 재개를 북한 측에 상기시키면서 남북한 양 측에 대하여 상호간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아가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선도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국**